

# 서울특별시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훈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157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2월 05일

발 의 자 : 이상훈, 김기대, 김기덕,  
김재형, 김정태, 김제리,  
김평남, 노승재,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송아량, 양민규, 이영실,  
이정인, 이현찬, 최 선,  
한기영, 황규복 의원(20  
명)

## 1. 주문

-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서울시 그린뉴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2050 탄소중립과 생태문명 전환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이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 2. 제안이유

-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시작으로 시민과 함께 다양한 실천과 선언을 통해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노력해 왔음. 하지만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국내 사회·경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기존 정책만으로는 2050 탄소 중립이라는 과감한 목표 달성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 EU, 영국, 일본,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과 도시에서도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앞다투어 선언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고,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경제체제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특히 작년 말 EU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계획을 발표하며 주요 실행수단으로 탄소국경조정세를 제시하며 앞으로 글로벌 무역경쟁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은 파리협정 재가입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기후목표 달성과 무역정책의 연계, 고탄소제품에 대해 탄소국경세와 같은 통상조치의 도입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 세계 온실가스의 30%를 배출하는 중국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하면서 바야흐로 세계는 탄소 중립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된 상황임.
- 이러한 전세계적인 엄중한 상황 속에서, 작년 7월, 서울시는 그린뉴딜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발표하였고, 중앙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으며, 작년 10월에는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상황에 이르렀음.
- 특히 2050 탄소 중립이라는 탈탄소 도시로의 이행은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의 모든 삶의 구조를 생태문명 중심의 녹색사회로 대전환하는 것이며, 그것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탈탄소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이 중요한 전략과제임을 분명히 하는 것임.

- 탄소 중립을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사회적 대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공의료와 사회복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정의로운 전환’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함.
- 서울시가 ‘그린뉴딜을 통한 2050 탄소중립 전략’과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 추진전략’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며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정 전반을 아우르는 총괄 추진체계를 시급히 마련하고,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실행해야 하기에 서울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 지원하고 견인해야 함.
- 따라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중앙정부, 자치구와 구의회, 시민사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 제정과 개정, 기후예산제 도입, 총괄추진체계 내실화 등을 통해 2050 탄소 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조례」 제37조

# 서울특별시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시작으로 시민과 함께 다양한 실천과 선언을 통해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국내 사회·경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기존 정책만으로는 2050 탄소 중립이라는 과감한 목표 달성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EU, 영국, 일본,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과 도시에서도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앞다투어 선언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고,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경제체제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작년 말 EU는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 계획을 발표하며 주요 실행 수단으로 탄소국경조정세를 제시하며 앞으로 글로벌 무역경쟁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은 파리협정 재가입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기후목표 달성과 무역정책의 연계, 고탄소 제품에 대해 탄소국경세와 같은 통상조치 도입 등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세계 온실가스의 30%를 배출하는 중국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하면서 바이든으로 세계는 탄소 중립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된 상황이다.

이러한 전세계적인 엄중한 상황 속에서, 작년 7월 서울시는 그린뉴딜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발표하였고, 중앙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으며, 작년 10월에는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분명히 선언하고 이행계획을 마련해 가는 상황이다.

특히 2050 탄소 중립이라는 탈탄소 도시로 이행은 서울이라는 거대도시의 모든

사회·경제적 구조를 생태문명 중심의 녹색사회로 대전환하는 것이며, 그것은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탈탄소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이 중요한 전략과제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탄소 중립을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사회적 대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서울시가 '그린뉴딜을 통한 2050 탄소중립 전략'과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 추진전략'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며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정 전반을 아우르는 총괄 추진체계를 시급히 마련하고,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실행해야 하며, 서울시의회도 상임위원회간 업무 분장의 한계를 뛰어 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 지원하고 견인해야 한다.

따라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중앙정부, 자치구와 구의회, 시민사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 제정과 개정, 전담 예산제도 도입, 총괄추진체계와 민관거버넌스 구조 내실화 등을 통해 2050 탄소 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2021년 월 일

**서울특별시회의의원 일동**